

선거철 쏟아지는 폐현수막...재활용은 '뒷전'

광주 자치구 5개월간 2만여장 수거...3월부터 폭증 동·서·남·광산구 재활용률 0%...대부분 소각 처리 북구만 '업사이클링' 시행...자원순환·일자리 확대

광주 도심에 뒤덮였던 선거 현수막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은 채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속·수거된 현수막은 총 2만8042장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1만2404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923장, 북구 5428장, 광산구 2545장, 동구 1742장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이후 수거량

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구는 2월 1071장에서 3월 2327장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남구도 같은 기간 1918장에서 3511장으로 증가했다. 남구는 4월에도 2912장의 현수막을 수거했다. 북구 역시 2월 989장에서 3월 1437장으로 증가하는 등 선거 국면과 맞물려 현수막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수거된 현수막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석유계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크다. 특히 소각 시 다 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할 경우 자연 분해가 어려워 토양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자치구의 재활용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의 올해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모두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치구는 별도의 재활용 사업 없이 대부분 소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자치구는 과거 국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수신이나 공유 돗자리 제작 등 재활용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함께 종료됐다. 현재는 주민들이 텃밭 가림막이나 물품 덮개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일부 현

수막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북구는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주머니,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재활용률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40.8%, 2025년 41.6%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4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했다.

지난해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2만2210개, 주머니 5920개, 모래주머니 1020개, 마대 850개 등 총 3만여 개의 생활용품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자원순환 효과뿐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치구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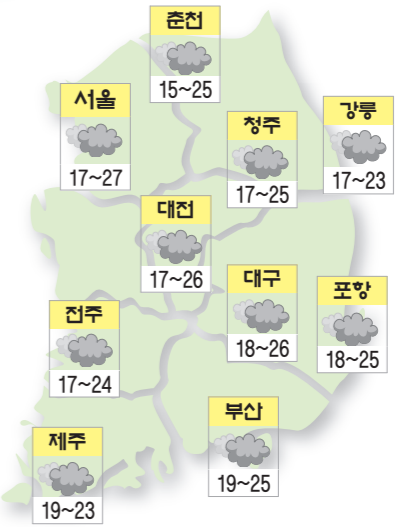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미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치구의 재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정부 역시 폐현수막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수천장의 현수막이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폐기물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재활용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환경 비용까지 고려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18	달림	00:30
맑음	19:45	달림	12:10



광주	17~24
목포	18~22
여수	19~24
순천	18~24
구례	17~24
광주	17~23
신도	18~24
죽산도	17~22
진남	18~24
진도	17~22

목포	미물(고)	07:08 / 19:29
	샘물(저)	12:45 / --:--
여수	미물(고)	01:56 / 14:34
	샘물(저)	08:30 / 20:22

전남교육청, 순천시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10~11일 국내·외 87개 대학 참여...입학전형 안내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7학년도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대학과 미국 트로이대학교를 포함한 87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입학전형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 관계자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대학별 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 입시 준비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연수도 운영된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통합을 앞둔 상황에서도 학생 진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보 접근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육정보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입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양 교육청은 앞으로 대입정보박람회 공동 개최와 권역별 확대 운영 방안을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대입정보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도 학생 지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양 지역의 교육 역량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학생 중심의 진학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아나바다 장터 찾은 시민들 휴일을 맞아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차없는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광주동구새마을 회원들이 마련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고생 살해 장운기, '강간등살인' 혐의 인정될까

22일 첫 재판...피고인 부인 속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운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운기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운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가 심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간등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운기의 범행 동기가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이었다고 판단했다.

장운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 없었다"며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장운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

하는 등 성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장운기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현장검증과 추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장운기의 범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살인 혐의를 강간등살인으로 기소했다.

다만 장운기가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성폭행 시도를 직접 입증할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남구, 취약계층 아동 선물 후원 캠페인 전개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후원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줄 산타 후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하는 선물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매년 겨울이 아닌 무더운 여름에도 산타가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의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남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 동 행정복지

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소원을 담은 편지 100여 통을 접수했다.

남구는 아이들의 소원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타 후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후원자는 소원 카드를 확인한 뒤 아동의 산타가 돼 선물을 직접 후원하거나, 후원금으로 구입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은 오는 8월 전 달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1) 또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062-676-3332)로 하면 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기조실장 자리 놓고 '물밑 신경전'

'교육부 파견 vs 내부 승진'...인사체계 쟁점 부상 지역 교육행정 이해도·조직 사기 고려 목소리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의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 인선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파견 인사와 내부 승진 인사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 체계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통합교육청의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교육감 직급을 현행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서 가급(1급 상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정책과 예산, 조직 운영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을 새로 설치하고 실장 직위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문제는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파견되는 사례가 많지만, 교육청 내부 인사가 승진하거나 교육청 추천을 거쳐 임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통합교육청 내부에서는 지역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해당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교육정책과 조직 문화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초기에는 제도 정비와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상황과 기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내부 인사가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조직 통합으로 업무 범위와 책임은 확대되는 반면 간부급 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획조정실장을 내부 승진 자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 안팎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배치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인사권 확대라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청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감에게 보다 폭넓은 고위직 인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양 교육청 일반적 공무원만 6000여명에 달하고 교원 규모도 3만명을 웃도는 만큼, 통합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인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일베사이트 기업 광고 중단

마네편 ○·쿠유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송출하던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

5·18기념재단은 일베 사이트 내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9개 업체의 광고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일베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사실상 확인한 뒤 해당 기업들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일 발송.

공문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고대행사 측이 광고 송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기념재단은 사이트 내 광고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북구, 이달 말까지 과태료 면제

광주 북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와 체계적인 동물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상·하반기 총 2차례 실시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전부 해당되며 고양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